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마·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차 례 ●●●

1. EU의 FTA 추진동향
2. EU 경제여건의 변화
3. 최근 EU의 대선진국 FTA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EU 경제는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데, EU는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대외수요를 확충하고자 선진국과의 대형 FTA를 추진하기 시작함.
 -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
 - 미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 유럽 정치권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쇠퇴'에 관한 인식이 확산된 점과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 EU가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함.
- ▶ EU는 미국, 일본과 각각 포괄적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규제 조율 또는 상호인정제, 일본과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협상과정부터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EU FTA) 양자간 무역·투자 증진 외에도 글로벌 통상규범 설정, 기체결 FTA에 대한 조율 등 글로벌 통상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 및 여타국의 FTA 정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임.
 - (일본·EU FTA) 일괄타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EU가 관세철폐에 상응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FTA 간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EU의 역내시장 규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EU-일본은 개별 FTA를 통해 연결되는데, 각자가 추진하는 양 FTA를 자국 중심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FTA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EU 역내시장 규모보다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데, EU의 역내시장 관련 규제가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1. EU의 FTA 추진동향

■ 2006년부터 시작된 EU의 적극적 · 포괄적 FTA 전략은 한 · EU FTA의 발효와 EU · 싱가포르 FTA의 타결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2006년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전략을 발표하고, 2010년 11월에는 중장기 통상정책(2010~15년)을 통해 FTA의 외연확대 전략을 펼쳐왔음.
- 글로벌 유럽전략하에서 FTA 상대국의 선정은 ① 시장잠재력 ② 시장진입장벽 ③ EU 경쟁국과의 FTA 추진여부 등 경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 · 아세안 · 남미공동시장 · 인도 등이 우선 FTA 협상국으로 선정된 바 있음.¹⁾
- EU는 2010년 중장기성장전략(2010~20년)인 ‘Europe 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FTA 정책을 강화하고 해외 비관세장벽 철폐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요구, 지재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²⁾
- 발효 2년차를 맞은 한 · EU FTA 외에도 최근 싱가포르와 FTA가 타결되면서 EU의 FTA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캐나다 · 인도와의 FTA도 일부 이견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도출한 상태임.
- 한 · EU FTA는 지금까지 EU가 역외국가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FTA로 이후 EU FTA의 기본틀(template)이 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의 FTA 타결은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와의 FTA는 2013년 상반기 중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와의 FTA도 잔여쟁점(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2013년 중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임.

표 1. EU의 FTA 추진 현황

지역	국가	경과	협상추이
아시아	한국	▶ 2011년 7월 발효	
	싱가포르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협상으로 변경 ▶ 2010년 3월 협상시작, 2012년 12월 타결	2013년 상반기 중 가서명 예정
	인도	▶ 2007년 6월 협상개시 ▶ 2013년 중 타결 목표(잔여쟁점: 서비스, 정부조달)	11차 협상 완료
	말레이시아	▶ 2010년 10월 협상시작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베트남	▶ 2012년 6월 협상개시	2013년 1월 2차 협상 완료
	태국	▶ 2013년 3월 협상개시	2013년 상반기 중 1차 협상예정
	일본	▶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 승인	2013년 3월 25일 협상개시 발표 2013. 4. 15~19 1차 협상예정
북미	캐나다	▶ 2009년 5월 협상개시 ▶ 2013년 상반기 중 협상완료 목표	타결 마무리 단계
중남미	콜롬비아/페루	▶ 2010년 2월 협상완료, 2012년 6월 서명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 에콰도르, 볼리비아 포함(이상 안데스 공동체) 모색 중	곧 잠정발효 예정

1) COM(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567 final. ‘글로벌 유럽’ 전략은 역외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EU 경제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하며, DDA 협상 지체, 미국의 경쟁적인 FTA 정책, 아시아 신흥국의 부상 등이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함.

2)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COM(2010)612.

표 1. 계속

지역	국가	경과	협상추이
중남미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6개국) ▶ 2010년 5월 협상완료, 2012년 6월 서명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곧 잠정발효 예정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 2010년 5월 협상재개	협상재개 후 8차 협상진행
북아프리카·중동	Euro-Med	▶ 1995~2002년 사이 제후협정 체결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와 개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	2013년 3월 모로코와 FTA 협상 개시
	GCC	▶ 2008년 협상 중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 2011년 12월 제후협정 타결, 2012년 3월 가서명 ▶ 제후협정의 부속협정으로 FTA 추진, 2012년 7월 가서명	정식서명 및 잠정발효 추진 중
	조지아	▶ 2013년 1월 5차 협상 완료	
	아르메니아	▶ 2012년 2월 EU 이사회의 협상 승인 이후 4차 협상 진행	2013년 4월 5차 협상예상
	몰도바	▶ 2012년 2월 협상시작, 2013년 3월까지 6차 협상 완료	2013년 6월 7차 협상예정
	아제르바이잔	▶ 1999년 이후 동반협력협정(PCA) 체결 ▶ PCA를 제후협정으로 격상하고자 협의 진행 중	4차 협상 진행
	벨라루스	▶ 2009년 양자간 섬유협정 만기 이후 EU가 섬유쿼터를 부과 중	

주: 1)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 Euro-Med(가입연도): 이집트(2004), 이스라엘(2000), 요르단(2002), 레바논(2006), 모로코(2000), 알제리(2005), 튀니지(1998), 팔레스타인(1997 잠정발효), 시리아(중단).

3) 걸프협력회의(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http://ec.europa.eu/trade>로부터 저자 정리.

■ 2010년 전후로 EU는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통해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의 호혜무역체제를 FTA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음.

- EU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유럽하의 기준에 의거, 적극적·포괄적 FTA를 추진해 왔으나 FTA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FTA를 추진함.³⁾
 - 페루-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 아세안 회원국(싱가포르 제외) 등과 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는 양허수준 및 포괄범위 면에서 한·EU FTA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됨.
 - EU는 과거 FTA를 지역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의 FTA 정책은 수출·투자 확대에 초점을 두는 도구적 관점이 짙어지고 있음.
- 현재 EU는 역외국과 28개의 무역협정(관세동맹 포함)을 발효 중이며, 9개의 무역협정을 협상 중인데, EU가 상호호혜 조건 없이 부여하던 호혜무역협정⁴⁾을 상당 부분 FTA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FTA 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의 도식 참고).
 - EU의 무역협정은 성격상 안보·외교적 동기, 개발원조/과거 식민지 관계, 경제적 동기 등으로 구분 가능한데, 최근에

3) Karel De Gucht, Open Trade, Open Minds. Speech in Prague, 24 March 2010. "It is clear that what we ask on market access from developed economies like Korea or Canada is different from what we discuss with poorer develop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or Africa. This differentiation is impor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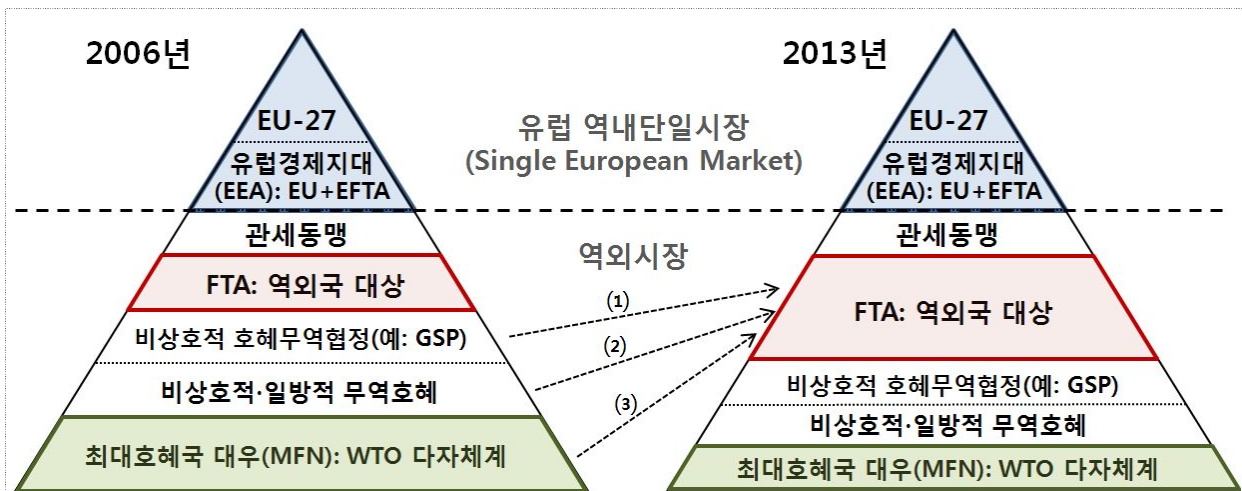
4) 본고에서 호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상호호혜 조건이 없는' 호혜무역협정은 권능보호조항(Enabling Clause)에 의거, 선진국(EU)이 개도국(동유럽 및 ACP 국가)에 부여하는 특혜관세제도 또는 특혜관세가 포함된 무역협정을 의미함.

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동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

- EU는 현재 176개 개도국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대폭 개정하여 GSP 수혜국을 70여개국으로 줄이고 나머지 국가와는 FTA 등의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가 유지해온 (1) 비상호적 호혜무역협정과 (2) 비상호적·일방적 무역호혜는 점차 FTA로 대체되고 있음.

그림 1. EU의 중층적 무역협정 체계



주: EU의 무역협정 체계는 중층적(multi-level)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장 최상위는 EU 27개국이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함께 실질적인 역내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그 이하에는 관세동맹(터키, 안도라, 산마리노), 역외국과의 FTA, 비상호적 호혜무역협정, 비상호적·일방적 무역협정 등이 자리 잡고 있음.

1) 비상호적(non-reciprocal) 호혜무역협정은 Cotonou 협정 등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양도서국(ACP) 국가들과 체결된 무역협정이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포함하는 범주임.

2) 비상호적·일방적 무역협정은 EU가 舊CIS 국가 또는 동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을 뜻하며 현재 EU는 동 체제에 대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으로 격상을 추진 중임.

3) 한·EU FTA를 비롯하여 2006년 이후 EU가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FTA를 의미함.

자료: Sapir(1998)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⁵⁾

2. EU 경제여건의 변화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2000년대 중반까지 EU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음.

- 2005~10년 EU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하며(그림 2 참고), 두 차례의 경기침체(2009년, 2012년)로 인해 2012년의 실질 GDP는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EU의 GDP 성장률(연도): 3.0('08) → 0.3('08) → -4.3('09) → 2.1('10) → 1.5('11) → -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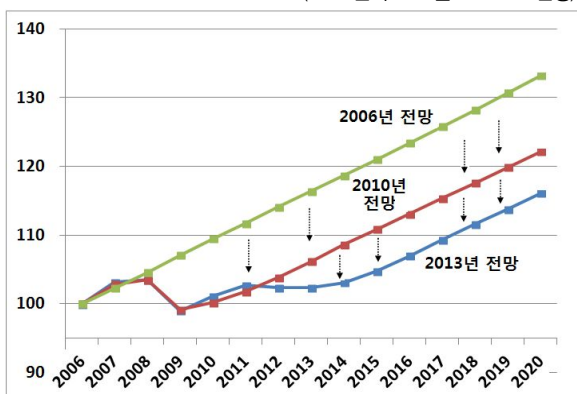
※ 2012년 EU의 실제 명목 GDP는 2006년에 예상된 전망치보다 18% 이상 낮은 수준

5) Sapir, Andre(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EC Regionalism,"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2, No. 3~5, pp. 717-732.

- 성장률 저하로 세계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2012년 33%에서 26.6%로 하락하였으며, 반면에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25.8%로 증가함.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채무로 인해 더 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하며, 기준금리도 이미 역대 최저수준까지 하락하여 통화정책의 입지도 매우 좁은 상황임.
- 유럽 전반에 걸친 부채축소현상(deleveraging)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소비·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산업, 노동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조치도 정치적 부담이 크거나 단기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그림 2. EU의 실질 GDP의 성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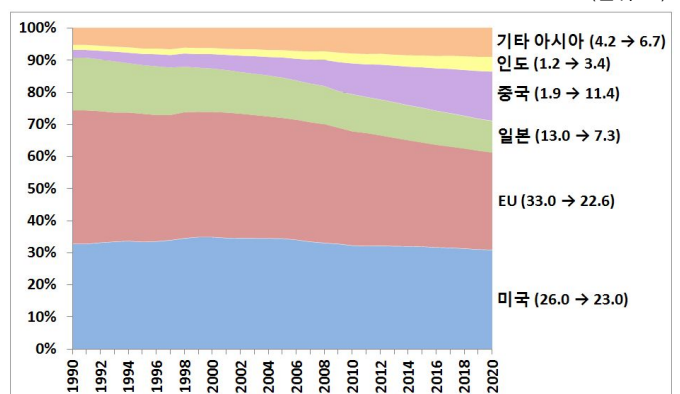
(2006년의 GDP를 100으로 산정)



주: 1) 2006년 12월, 2010년 4월, 2013년 3월 전망간의 비교.
2) 2013년 전망(파란색)에서 2006~12년 GDP는 실적치이며, 그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3.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주: () 안은 1990년과 2020년 사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의미함.
자료: Global Insight 2013년 3월 전망.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대외수요 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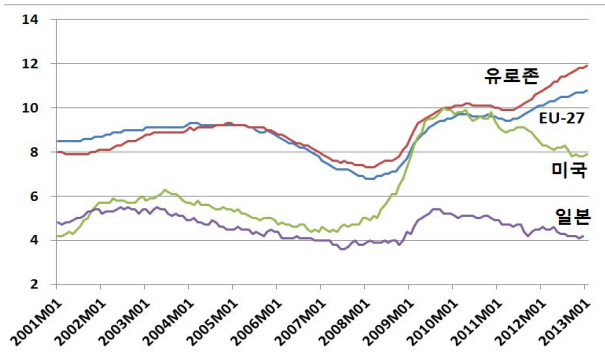
- EU의 실업률은 남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 중이며, 2011년 중반 이후 실업률이 하락추세인 미국과는 대조를 이룸(그림 4 참고).
- 일부 국가의 청년실업률이 50%를 상회하면서 사회문제까지 비약하고 있어 EU와 회원국은 긴축기조하에도 고용유지와 창출에 가장 큰 목표를 두어야 하는 상황임.
 - ※ 청년실업률('13.1, %): 그리스(58.4), 스페인(55.5), 이탈리아(38.7), 포르투갈(38.6), 아일랜드(30.9), EU(23.6)
- EU의 중장기 성장계획인 Europe 2020은 EU의 고용률 목표를 75%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4%대에서 고착화되고 있어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강화조치 없이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⁶⁾
 - ※ 국가별 고용률('12.12, %): 네덜란드(75.3), 스웨덴(73.5), 독일(73.3), 덴마크(72.4) ⇔ 그리스(50.2), 스페인(54.6), 이탈리아(56.9), EU 평균(64.6)
-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거치면서 내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기를 지탱하는 현상이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났음.

6) EU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리스본 전략(2000~10년)은 목표에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 원인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구체적인 평가척도 결여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Europe 2020(2010~20년)에서는 구체화된 5대 목표를 정함. 5대 목표: ① 고용률 75% 달성 ② R&D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증대 ③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20% 달성, 에너지효율 20% 증대(일명 '20-20-20' 목표) ④ 조기학업 중단자 비중을 10% 이하로 낮추고 30~34세의 대학졸업 비중을 40%까지 증대, ⑤ 빈곤층 25% 감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생산감소와 고실업 속에서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현상이 과거 경기침체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그림 5 참고), 재정위기로 인해 역내수출이 감소함에도 역외수출이 많은 국가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함.
- 유로존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 스웨덴 등 제조업 강국의 경기둔화가 심하지 않은 것은 역외수출이 많았던 데 기인함.
※ EU의 경기침체에도 2012년 독일의 역외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고(1,389억 유로)를 기록

그림 4. EU의 실업률 추이(주요국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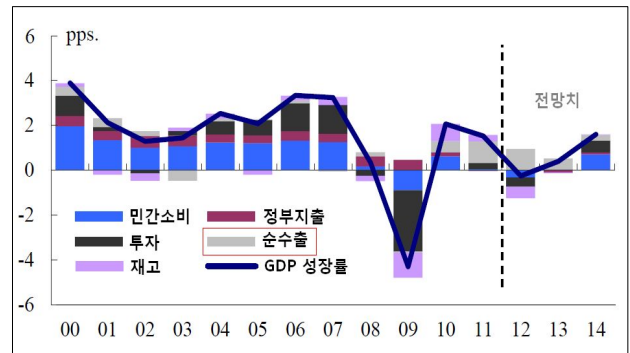
(2006년의 GDP를 100으로 산정)



주: 1) 2006년 12월, 2010년 4월, 2013년 3월 전망 간의 비교.
2) 2013년 전망(파란색)에서 2006~12년 GDP는 실적치이며, 그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5. EU 경제성장률과 항목별 구성

(단위: %)



주: 총 GDP 성장률 중 각 항목별 기여도를 %포인트로 표시.
자료: EU 집행위원회 2012년 11월 전망.

■ 그동안 FTA 확대의 필요성은 주로 산업계가 주장하였으나, 각국의 정계도 높은 관심을 표출하면서 미국, 일본 등 거대 선진국가와의 FTA 추진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었음.

-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영국 총리는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이며, 그동안 FTA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 정상도 수용 쪽으로 선회함.

○ 2013년 초를 전후하여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으며,⁷⁾ 영국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에 대한 발언과 별도로 미국·EU FTA를 G8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설정할 것임을 밝힘.⁸⁾

○ 과거 미국과의 양자무역 자유화 논의에 반대를 표시한 바 있는 프랑스⁹⁾도 문화산업에 대한 제외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FTA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¹⁰⁾

○ 유럽의회는 일본, 미국과의 FTA 추진에 관한 결의문을 협상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통과시킨 바 있는데, 다른 FTA 추진 결의문에 비해 지지를 표시한 의원 수가 많아진 것이 특징임(특히 미·EU FTA).

※ 미국과의 FTA 추진에 관한 결의문(2012. 10. 23 통과): 찬성(84%), 반대(15%)

※ 일본과의 FTA에 추진에 관한 결의문(2012. 6. 13): 찬성(76%), 반대(13%)

- 이와 같이 유럽 정치권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재정위

7) "Merkel says eurozone not 'closed shop' to UK"(2013. 1. 24), *Financial Times*.

8) "David Cameron sets free trade agreement as his G8 priority"(2013. 1. 1), *The Guardian*.

9) 1998년 EU 통상장관인 Leon Brittan은 ① 미·EU 간의 기술장벽 철폐 ② 공산품 관세철폐(2010년까지) ③ 서비스 무역자유화 ④ 정부조달시장, 투자 부문 확대개방을 골자로 하는 신협대서양 시장(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Agreement)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철차상의 이유와 WTO와의 정합성 문제 등으로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대를 제기, 결국 현실화되지 못함.

10) "La France et l'Allemagne favorables à une zone de libre-échange avec les Etats-Unis"(2013. 2. 13), *Le Monde*.

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쇠퇴’에 관한 인식이 확산된 점과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 EU가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세계 강제기준이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은 글로벌 기준 및 표준선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3. 최근 EU의 대선진국 FTA

1) 미·EU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미국과 EU는 2013년 2월 FTA 협상을 공식화한 후 2013년 상반기 중에 협상을 시작할 계획임.

- 2011년 11월 미·EU 정상회의 이후 미·EU FTA 추진여건이 빠르게 조성되었으며, 미국과 EU는 2013년 2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FTA 협상을 공식화하였음.

- 협상을 공식화하기 전에 양측의 의회(미 상원, 유럽의회)가 FTA에 대한 지지선언을 채택하는 등 미·EU FTA는 유례 없이 빠르게 진전 중임.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모두 미·EU FTA에 지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 측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U 순회의장국(2013년 1~6월)인 아일랜드는 임기 내에 미·EU FTA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언

- 현 EU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완료되는 2014년 10월이 1차적인 협상완료 시한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미 대통령의 잔여임기(2016년 말) 내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미·EU FTA 전개과정

일시	내용
2011년 11월 28일	미·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을 구성하도록 지시
2012년 2월 22일	미 상원은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6월 19일	고위급 작업반 중간보고서 발표(2012. 6. 19) • 미·EU 간의 포괄적 무역·투자협정(이하 미·EU FTA로 지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 무역협정은 관세, 규제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권을 포함할 것을 권고 • 미·EU가 각각 체결한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고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제시하도록 제안
10월 23일	유럽의회(2012. 10. 23)는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 유럽의회는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협상 위임권을 승인
2013년 2월 8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2월 11일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2013. 2. 11) •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3대 분야로 시장접근(분야 ①), 규제 이슈 및 비관세장벽(분야 ②), 국제통상 규율 및 차세대 협력(분야 ③)을 제시 • 분야 ①은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나, 분야 ②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 높은 SPS plus와 TBT plus를 포함할 것임을 강조 • 분야 ③은 미·EU 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글로벌화하여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
2월 12일	오바마 미대통령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통해 EU와의 FTA 협상출범을 공식화
2월 13일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대통령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시작을 공식화

자료: 김영귀 외(2013. 3),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p. 5.

■ 미·EU FTA는 시장개방의 폭과 깊이에서 매우 포괄적 FTA가 될 것으로 예상

- 내용상으로는 포괄적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시한이 촉박하고 협상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식상 중층구조(tiered structure)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작업반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내용은 크게 ① 시장접근 ②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 ③ 국제통상 규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측의 개방수준이 이미 높아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규제 및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양측의 차이가 커, 전면적·중심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임.
- 목표시한을 고려할 때 1단계에서 시장접근 분야를 타결하고, 2단계에서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는 중층구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식품 및 화학 관련 규제, 농업보조금 문제 등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FTA 선례를 감안할 때 포괄적 FTA의 일괄타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타결 후 발효까지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 미국의 식품규제가 완제품 중심인데 반해 EU의 규제는 전 가치사슬(value-chain)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식품, 화학 분야에서 규제차이가 존재(예: GMO 관련 규정)
 - ※ 미국 농식품업계는 미국·EU FTA를 통해 양측이 대립 중인 미국 식품규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¹¹⁾
 - 따라서 예정한 협상기한 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¹²⁾

2) 일본·EU FTA

- 일본과 EU 간의 FTA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동일본 지진사태 등 외적요인이 FTA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일본시장은 낮은 관세와 높은 비관세장벽이 특징(EU 입장에서)으로 일본과는 FTA가 아닌 규제대화를 통해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력한다는 것이 EU의 기존 입장이었음.
 - 일본의 제조업 부문 수입관세(가중평균)는 1.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 중 최저수준인바, FTA를 통한 수출증대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일본의 FTA 협상 요구에 대해 EU는 규제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2010년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음.¹³⁾
 - ※ EU 회원국 중에는 영국과 스페인이 일본과의 FT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¹⁴⁾
 - 일본·EU FTA는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사태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해 같은 해 5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되어 왔음.

11) 미국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외 59개 단체공동성명. 2012.11.15./Without Agriculture, U.S-EU FTA Would Struggle In Congress. Inside US Trade. November 12, 2012. 미국 식품업계가 EU에 수정을 요구 중인 현안으로는 GMO 및 라벨 표기 규정, 동물용 성장호르몬 사용규정, 소, 돼지 사료첨가제(ractopamine) 관련 규제,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음.

12) 미·EU FTA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김영귀·강유덕·이경아(2013),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06호를 참고할 것.

13) European Commission(2010),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p. 11.

14) EU-Japan trade deal - rhetoric not reality. Public Service Europe. 17 May 2011.

- 2011년 5월 제20차 정상회담에서는 1) 일본·EU FTA를 추진하고, 2) 정치·글로벌·기타 분야의 협력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협정(예: 기본협정)을 병행하여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2년 5월 일본·EU 간의 FTA 사전조사(scope exercise) 결과가 발표된 후 같은 해 하반기 동안 협상추진을 위한 양측의 내부절차가 진행되었음(표 2 참고).
- 2012년 11월 EU 이사회는 FTA 협상추진을 승인한 데 이어, 일본정부도 내부 절차를 마치고 2013년 3월 25일 협상이 공식화되었음.

표 3. 일본·EU FTA 전개과정

일시	내용
2010년 4월 28일	제19차 일본·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일본·EU의 관계강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그룹(High level group)을 구성하는 데 합의 • 고위그룹은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지재산, 경쟁, 공공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할 것을 차기연도 정상회의 의제로 제출
2011년 5월 28일	제20차 일본·EU 정상회의 • 정상회의에서는 1) 일본·EU FTA를 추진하고, 2) 정치·글로벌·기타 분야의 협력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협정(예: 기본협정)을 병행하여 체결하기로 결정 • 일본·EU FTA의 내용과 개방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조사(scope exercise)를 1년간 실시하기로 결정
2012년 5월 31일	일본·EU 간 사전조사(scope exercise) 결과 발표
6월 13일	유럽의회는 일본·EU FTA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찬성(76%), 반대(13%)
7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에 일본·EU FTA 협상을 위한 위임권(mandate)을 공식 요청
10월 18~19일	EU 정상회의 • 수개월 내에 일본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상지침에 합의할 것을 촉구
11월 29일	EU 이사회(외교/통상장관 회의): EU 집행위원회에 일본과의 FTA 협상권한을 승인 • EU의 수입관세 철폐에 대해 일본 측이 이에 상응(parallelism)하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 • 민간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 •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이 미미할 경우 협상 중단을 명시
2013년 3월 25일	• 양측 정상은 일본·EU FTA 협상 출범에 공식적으로 합의(아베 총리, 바로소 집행위원장, 룬푸이 EU 상임의장) • 2013년 4월 중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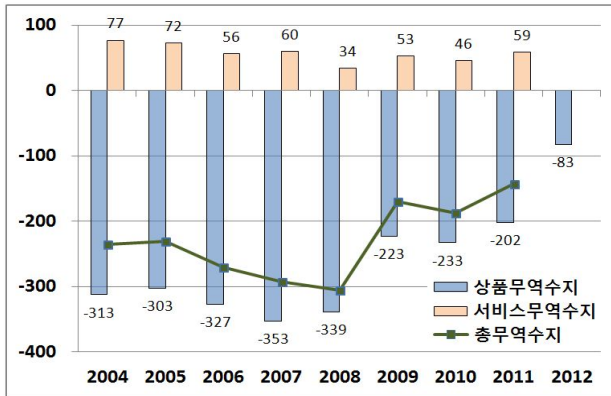
자료: 언론자료를 통한 저자의 재구성.

■ 일본·EU FTA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가운데,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제조업 부문 관세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으로, EU의 대일본 수출에서 관세철폐보다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EU의 대일본 상품무역수지는 적자(2011년 206억 유로)이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인 흑자(2011년 59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기대하는 바가 큰 상황임(그림 5 참고).
 - 지금까지 일본시장은 독특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선진국 중 시장진입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받아 왔음.
 - 미국이 TPP를 통해 일본과의 FTA를 시도한다는 점은 EU 서비스업계가 일본·EU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그림 6. EU의 대일본 무역수지

(단위: 1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표 4. 일본의 비관세장벽

(단위: 관세상당치, %로 전환)

품목	일본의 비관세장벽
식품, 음료	25,0
화학, 제약	22,0
전기기계	11,6
차량	10,0
운송장비	45,0
금속 및 금속제품	21,3
목재, 종이제품	15,4
기타 기계	30,0
개인, 문화, 기타서비스	6,5

주: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대EU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뜻함.

자료: Copenhagen Economics(2010).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 대부분의 EU 산업계가 일본과의 FTA 협상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EU 자동차업계는 일본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함.
 - 식품, 제약, 서비스 관련 산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BusinessEurope(EU의 전경련에 해당)도 지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전제로 제시함.¹⁵⁾
 - EU 자동차업계(ACEA)는 자동차 부문의 무역역조, 일본의 규제 관련 비관세장벽, 고령화에 따른 일본시장의 포화현상 등을 근거로 일본과의 FTA에 반대입장을 표명함.
 - ※ EU의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연간 16만 4천 대(38,8억 유로) 규모인 데 반해 대일본 수입은 연간 75만 5천 대(96억 유로) 수준임.
 - ※ EU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10%인 데 반해 일본은 무관세여서 FTA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철폐 효과는 없음.

■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인해 일본·EU FTA 협상은 한국과의 FTA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일본과의 FTA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바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관철시킴.
 - ① 일본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포함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
 - ② 자동차 산업이 민감분야임을 인식하여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원상복귀(MFN 수준)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할 것
- 이에 따라 EU 이사회는 두 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승인하였음.
 - ① 일본·EU FTA는 민감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시켜야 하며, ②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노력이 부족할 경우, 협상을 중단(pull the plug)하도록 명시함.
 - 일본·EU FTA에 포함될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보다 더 강력한 조치일 것으로 예상(프랑스 통상장관 발언)¹⁶⁾

15) 유럽산업단체들의 일본·EU FTA 공동지지선언. Calls for a Free Trade Agreement with Japan Joint Statement by 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s. 19 September 2012./BusinessEurope, EU-Japan FTA Negotiations: Focus on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29 November 2012.

- 일본과의 FTA는 EU가 지금까지 추진한 FTA 중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이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높음.
 - 지금까지 역외국과의 FTA(미국 제외)는 EU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일본·EU FTA는 EU의 GDP를 1.9%까지 상승시키고, 3,193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EU가 주장하는 비관세장벽 철폐요구와 기체결 EPA를 통한 일본의 규제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간에 큰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영국 통상장관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 일본·EU FTA 협상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임.¹⁷⁾
 - EU 자동차업계는 한·EU FTA 때보다 더욱 수위가 높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U 측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 유럽자동차협회(ACEA)에 따르면 EU의 자동차 관세철폐는 일본 생산업체들에 연간 12억 유로의 이익(관세절감)을 제공

4. 전망 및 시사점

- (미·EU FTA) 당초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역외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FTA는 양자간 무역·투자 증진 외에도 글로벌 통상규범 설정, 기체결 FTA에 대한 조율 등 글로벌 통상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양측이 규제의 조화(harmonization) 또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을 통해 공동의 규범과 기준을 도출할 경우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매우 공고해질 것임.
 - 다자무역질서(WTO)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양측의 논의를 통해 진전된 새로운 통상규율이 WTO DDA 협상에 추진동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NAFTA) 협상 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는 당시 다자체제하의 서비스 무역협정(GATS, 1994)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 ※ 미국과 EU는 양측의 합의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에 대한 원칙을 WTO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다자체제에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기여하였음.¹⁸⁾
 - 미·EU FTA와 양측 기체결 FTA의 조화 과정에서 FTA의 표준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다만 과거 발표된 EU의 FTA 추진일정과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공언된 협상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에 따라 무역·투자 증진을 통해 2~3년 내에 성장효과를 누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미국과 EU가 동시에 일본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특히 중국의 적극적 FTA 추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FTA를 통한 미국과 EU의 수출확대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EU·일본의 FTA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16) France, Italy win safeguard clause in EU-Japan trade pact. Euractive.com 30 November 2012.

17) Ibid.

18) Communication from the EU and the US: Contribution to the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C/W/338. 13 July 2011.

■ (일본·EU FTA) EU와 일본의 여타 FTA 추진 선례를 감안할 때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수용여부에 따라 협상속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중층적 협상이 예상되는 미·EU FTA에 비해 일본·EU FTA는 일괄타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는데, EU가 관세철폐에 상응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EU 통상장관은 일본·EU FTA의 발효까지 4~5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EU가 추진한 여타 FTA 추진속도와 유사한 것임.

- 일본·EU FTA 발효는 일본산 제품과의 경합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대일본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과 EU 시장 경합관계에서 일본·EU FTA 발효 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시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일본 진출이 수월해질 것임.

※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관세장벽과 달리 제3국도 수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

- EU와 미국이 모두 일본과의 FTA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역점을 두는바, 이후 한국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

○ EU가 주장하는 일본의 제품규제 완화,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시장투명성 제고 등은 한국기업의 요구와 상응하는 바가 많아, 일본·EU FTA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이 수월해질 수 있음.

■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FTA 간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EU의 역내시장규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통상체제의 중심축은 ① 다자주의(GATT/WTO)와 ② 양자주의(FTA)를 거쳐 선진국간의 FTA(미·EU, 일본·EU) 또는 거대 FTA(TPP, RCEP) 같은 ③ 거대블록화로 발전 중인데, 지금까지 EU 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 또는 주도하기 위해 변화해 옴.

○ EU 통상정책의 변화: ① 역내시장 우선주의+다자주의(~2004년) → ② 양자주의 수용시기(2006~11년) → ③ 거대블록화 시도(2012년~)

○ 미국·EU·일본은 개별 FTA를 통해 연결되는바, 각자가 추진하는 양 FTA를 자국 중심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

- EU 역내시장 규모보다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바, EU의 역내시장 관련 규제가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 EU는 역내단일시장 확대나 소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자국 중심의 규제체계를 부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take-all-or-leave-it attitude).

○ 그러나 FTA를 통해 연결된 해외시장의 규모가 EU 단일시장규모를 상회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상대국가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KIEP